

유럽의 경제위기와 노사관계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요즘 유럽의 주변부 나라들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와 그로 인해 그 나라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구조조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외환 금융위기를 이미 경험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지난해 5월에는 그리스에 대해 1천 1백억 유로에 달하는 EU와 IMF의 구제금융이 지원되었고, 지난해 11월에는 아일랜드에 대해 8백50억 유로의 구제금융이, 올해 5월에는 포르투갈에 대해 780억 유로의 구제금융이 결정되었다. 이로써 국가채무 때문에 PIIGS라고 불리던 나라 -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 가운데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고, 시장의 관심은 유로지역에서 네 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스페인을 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차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는 2차 구제금융이 없으면 국가부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다시 내몰리고 있다. 심각한 것은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이나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대한 구제금융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위기의 근저에는 유로라는 단일화폐로의 통화통합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과 같이 현재의 위기에 처한 유럽의 주변부 나라들의 위기를 배태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한 통합유럽의 출범과 1999년의 단일통화(유로)의 도입이었다. 단일한 통화동맹에 속하게 된 유로국가들은 곧바로 유럽의

중심국가인 독일과 같이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은 풍부한 신용과 건설 붐에 기반한 경제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경제의 잠재력을 넘어선 호황이 유럽 주변부 나라들의 국제수지 적자를 초래했지만, 유로 지역 전체로는 국제수지가 균형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그늘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빛과 부동산 거품에 기반한 경제성장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나아가 빛을 낸 주체가 그리스와 같이 정부였건, 아일랜드나 스페인같이 민간부문이었건, 포르투갈과 같이 정부와 민간 모두였건 간에 금융위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의 재정위기로 비화되었다. 정부 채무가 아니었더라도 부실에 빠진 민간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통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구제금융을 받았어도 재정위기로부터의 회복가능성은 여전히 암울하다. EU와 IMF에 의한 구제금융은 세수확대와 재정지출 축소라는 긴축재정과 공공부문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임금동결 등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긴축조치와 구조조정으로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성장을 위축시켜서 GDP 대비 채무가 다시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출을 통해 외부시장에 의존해서 성장하는 방법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화가치를 큰 폭으로 떨어뜨려서 수출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유로라는 단일화폐를 사용하는 한 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스페인까지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를지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한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현재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이미 유로지역의 중심국가로서 구제금융을 위해 가장 큰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독일을 중심으로 리프로파일링(reprofiling)이라는 새로운 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그리스에 대해 실질적인 채무조정(restructuring)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일부 정치 지도자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제금융을 주도한 유럽중앙은행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채무 구조조정이 채권자인 유럽지역 은행들의 위기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채무 구조조정에 따른 그리스의 신용등급 하락이 아일랜드와 포르투갈로까지 전염되면서 새로운 국제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중앙은행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럽중앙은행 자체가 구제금융 과정에서 가장 큰 채권자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냉소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통화가치 절하와 수출확대를 통해 위기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 앞에 놓인 선택지는 몇 가지 남아 있지 않다. 성공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채무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일부 나라들이 단일통화로부터 이탈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럽통합이 걸어온 궤적을 보면 비록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재정정책까지를 통합하는 더 높은 수준의 경제동맹으로 유럽통합이 진전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번 호는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유럽의 주변부 나라들 가운데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경제위기가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다루었다. 각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고 필자들의 접근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아일랜드에 관해 Paul Teague는 20여 년 전부터 지금의 위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유럽중앙은행과 IMF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 처방의 지속불가능성과 노동조합이 처해 있는 딜레마를 제기하고 있다. Sebastian Royo는 200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포르투갈에서의 위기 진행과정과 각 정치세력 및 노동조합의 대응을 살펴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제기한다. 반면 Miguel Lucio는 스페인의 노사관계에 비추어 노동시장 유연화와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정책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독자들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각 나라의 상황을 평가한 세 글을 통해서 현재 유럽의 주변부 나라들이 직면한 경제위기가 노사관계에 미친 효과 및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여러 시각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IMF가 제공한 구제금융에 수반되는 가혹한 구조조정을 받아들여야 했던 경험은 우리에게도 아직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고용이 늘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계속 커지며, 저임금고용과 근로빈곤층이 꾸준히 늘어나는 우리의 경제구조도 당시의 구조조정과 시장만능주의 패러다임의 결과다. 미국에서 시작해서, 유럽의 주변부지만 선진국으

로 분류되는 나라들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는 시장만능주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구제금융의 대가로 과도한 긴축과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정책처방도 경제적·정치적으로 모두 정당화되기 어렵다. 채권자의 권리는 보호하면서 잘못된 경제적 선택의 부담을 모두 채무국의 국민들에게 지울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채권자의 요구로 강요되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지금 유럽의 주변부 나라들은 헤어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함정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선택도 노동자와 국민들의 삶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채권자를 포함해서 모두가 공정하게 비용을 부담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KLI